

21대 원구성 원론적 동의...위기 극복엔 초당적 협력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무슨 얘기 오셨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566일 만에 청와대에서 회동하면서 문 정권 후반기 정치권의 '협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와 과거 정권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술한 법안과 정책이 발목이 잡혔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 등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에도 5·18 관련법 등 지역 현안 법안 등이 여야 대립 속에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15 총선을 통해 몸집을 키운 '슈퍼 여당'과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개편하면서 '달리진 보수'를 표방한 여당이 법정 기한 내에 21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코로나 19관련 추경과 현안 법안을 처리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21대 원구성, 원론적으로 동의-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은 오는 6월 5일 시작되는 21대 원구성의 초석을 닦는 자리로 기대됐다. 21대 원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4·15 총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진다. 주요 갈등 요인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국회 개헌안 등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효율적 법률 처리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아당의 건전한 견제를 내걸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21대 원구성은 단연 대화의 중심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법으로 정해진 시점에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고, 이에 주 원내대표는 "협조하고 싶다"고

문대통령 "국회 정상적으로 개원했으면" 주호영, 원구성 협상 '빠 있는' 농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주목 격의없는 대화 집권 후반기 '협치' 기대

답했다.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지만 566일만에 대통령과 한 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가 원활한 국회 원구성에는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격의없는 대화 '협치'로 이어지나-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처음이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를 맞아 여야 최고위층이 협치에 시동을 건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에 1년 6개월만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1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가동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은 '격의없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상춘재는 청와대 경내에 최초로 지어진 전통 한옥으로, 주로 외빈 접견 시 이용된다. 공식 회담이나 회의 성격이 강한 본관 대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춘재를 오찬장으로 택한 것은 격의 없는 소통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모두 '노타이' 차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먼저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도 "예. 반짝반짝"이라고 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다가져간다' 얘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최근 여야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주 원내대표가 빼있는 소리를 했고, 이를 웃음으로 넘기는 장면도 연출했다.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회동 후 청와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또 오찬 회동의 메인 메뉴로 비빔밥이 테이블에 올랐다. "협치"를 상징하는 비빔밥은 문 대통령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다. 2017년 5월19일 첫 회동과 2018년 8월16일 두 번째 회동에 비빔밥이 올랐다. 두 번째 회동

때는 말복인 점을 감안해 오색 비빔밥에 삼계죽을 곁들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총 156분간 오찬 겸 회동을 진행했다. 낮 12시1분에 만나 오후 2시3분까지 오찬을 가진 뒤 오후 2시37분까지 경내 산책을 하고 헤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전대, '대선 전초전' 되나

이낙연 이어 김부겸 의원도 출마쪽 가다 영호남 지역·계파 구도 부각 가능성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당 대표 경쟁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그동안 관망하던 김부겸 의원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대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애초 이 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의원 간의 3파전 구도가 유력했지만 김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전당대회가 사실상 대선 전 초선으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 측은 28일 "당권 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공언

해 왔다.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한 이후에는 김 의원이 당권을 거치지 않고 대권으로 직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당권을 잡더라도 '임기 6개월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김 의원 주변에서는 당권을 거쳐 대권으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위원장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새로운 판으로 짜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독주에 대해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심한다면 영남권 대표 주자로서 통합의 메시지를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파전이 될 경우 구도는 복잡해진다. 일단 대권 주자인 동시에 당권 주자인 이 위원장

과 김 의원 간 전선이 부각되면서 호남(이낙연) 대 영남(김부겸) 등 지역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확실한 지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친문' 표심을 놓고도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전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후보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통정리 가능성도 작아진다.

한편 이 위원장 측은 전대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 중이다. 이미 출마는 기정사실화한만큼 출마 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 측은 "코로나19구난극복위원장과 국회 개원 상황 등을 고려해 출마 발표 시기가 6월 초를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당청, 의대 정원 500명 확대 검토

코로나19 등 선제 대응

의사협회 반대로 난항 겪을 수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지역이 분명히 있다"며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조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와도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 현장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인력 확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민

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보건 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과 함께 필수·공공의료 취 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당청은 의대 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못 미치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3배인 3.1%"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감염병 위기는 시스템 개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평소에 활용할 수 없는 공공 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The 청렴하면 더 행복해요!

시민과 함께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